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함께한 민주당, 국민의힘과 개악안 정치적 거래 소문... “참담하다”

✎ 이재준 기자 | © 승인 2023.12.11 11:49

민주당 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및 선전전' 중



정만영 세종충남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8일 민주당사 앞에서, 50인(50억) 미만 적용 유예 2년 연장안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윤석열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하자!

지난 5일부터 민주당 총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식품노조가 4일 차인 지난 8일 함께 했다.

아침 8시 출근선전전을 시작으로, 점심 선전전, 오후 민주당 앞 선전전, 오후 민주당사 앞 필리버스터, 저녁 선전전까지 이어졌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정만영 세종충남지부 노안위원장, 김상엽 수도권지부 노안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사무처 간부들이 함께 했다.

민주당사 앞 필리버스터에 나선 정만영 세종충남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함께 했던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예산안, 총선 등과 연계해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참담하다"며 50인(50억) 미만 적용 유예 2년 연장안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현재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긴급하게 진행한 뒤,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기한은 개악을 저지할 때까지라 밝혔다.

이날 농성 및 선전전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도 함께 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및 선전전'



중대재난  
대책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중대재난대책법  
무력화하는  
윤석열 퇴진하라!  
민주노총 / 생명안전행동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강요책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을 유  
차별금지법 철폐 반대

#모르면 찬성 #알면  
큰 차별  
추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중대재난 회색범  
개약 저지하자!**  
민주노총 / 생명안전행동



국회게시판

9.19 군사합의

2024  
긴축

지민과  
방이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 cnrrwns@hanmail.net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